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51
----------	-------

발의연월일 : 2025. 6. 2.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서왕진
박지원 · 김재원 · 김준형
차규근 · 황운하 · 정춘생
강경숙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원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인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및 고지”로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1. 중증후유장애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 생활자금의 대출, 양육비·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육비·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0조제4항에”를 “제30조제5항에”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4호 중 “제30조제4항에”를 “제30조제5항에”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제30조제4항에”를 “제30조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u>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② ----- ----- ----- ----- ----- ----- ----- ----- ----- <u>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u> ----- ----- <u>.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u> <u>1. 중증후유장애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u>
<u><신 설></u>	

<u><신 설></u>	<u>2. 유자녀: 생활자금의 대출, 양육비·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u>
<u><신 설></u>	<u>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u>
<u><신 설></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u>
<u><신 설></u>	<u>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육비·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④ (생 략)</u>	<u>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u>
<u>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5항에-----구체적인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및 고지-----.</u>
<u>⑥ (생 략)</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생 략)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u>제30조제4항에</u> 따라	② ----- <u>제30조제5항에</u> -----

<p>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p>	<p>----- ----- ----- ----- -----.</p>
<p>③ (생략)</p> <p>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p> <p>① (생략)</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3. (생략)</p> <p>4. <u>제30조제4항</u>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p> <p>5. ~ 14.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30조제5항</u>에----- -----</p> <p>5. ~ 14. (현행과 같음)</p>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30조제4항</u>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 ⑧ (생략)</p>	<p>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0조제5항</u>에----- ----- -----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